

#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시민사회 간담회 질의서

## 현장 질의서

○ 질의/응답은 총 13문항이며, 참석자 의견질의 후 후보자 전체 답변.

### 1 개발 분야 : 용산업무지구 개발 및 국공유지 매각

국공유지 민간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2022. 7. 26.) 서울시가 발표했던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알짜배기 국공유지인 만큼, 민간 재벌의 불로소득으로 변질되지 않고, 서울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공이 강제수용한 토지, 기존 보유한 토지 등 국공유지를 민간 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개발에 대한 이익이 일부 건설업자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따라서 국공유지 개발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이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 개발권이 민간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용산국제업무 지구 외의 다른 개발에서도 서울시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마포구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비수도권의 민간 처리시설에서 소각되면서 비용 증가와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원천 감축과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 후보님께서 어떤 자원순환 정책과 쓰레기 원천 감축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을 표방하며 녹지 확충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조정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층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녹지가 활용되고, 남산 곤돌라 사업·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처럼 기존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은 오히려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과 지하 개발이 반복되면서 가로수의 뿌리 공간은 줄어들고, 수관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나무는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니라 탄소 흡수·열섬 완화·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 후보님께서 서울의 도시 나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의당 공약에 '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이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이듯, 서울시 위원회 회의도 개인정보·보안 등 비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사전에 공개하고 논의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 회의공개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별도의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시민 대상 사전 고지, 방청권 보장, 책임성 있는 회의록 공개 등 핵심 장치가 미흡합니다. 또한 상당수 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운영되어 위원 간 원활한 의견 교류와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현행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는 별도로, ▲회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 법정화 ▲서면심의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 시민 사전 고지 및 방청권 보장 ▲위원 명단 상시 공개 ▲회의록 속기 작성 및 7일 이내 공개 ▲공개 의무 위반 시 의결 무효를 담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회의록 공개를 넘어, 시민이 서울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전에 알고 직접 확인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장 임기 내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더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정의당 공약에는 주민참여예산도의 실질화를 위해 시민감시체계구축·주요 사업 모바일 투표·일정 예산 이상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의무화·모범 지자체 인센티브·어린이, 청소년 참여예산 별도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제안사업수는 19년 대비 17.5%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부서 부적격판정 비율이 증가하여 최종 편성된 공모사업예산 규모는 19년 대비 2.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숙의 과정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축소, 지원협의회 미운영, 자치구와의 제도 협력 중단 등 운영 또한 형해화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정의당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과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복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운영계획 전면개선·홍보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복원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과 예산·재정 분야 전반의 시민 참여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5 기후환경 분야 : 한강 복원과 교통 기본권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노들섬 등 한강 개발 공약과 더불어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내 하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강과 그 지천들은 서울의 핵심 생태축인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는 홍수와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주요한 보루이기도 합니다. 정원오 후보님께서 구상하시는 한강과 지천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자전거는 중요한 생태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의 단절과 노면 불량, 자전거 주차장 방치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자전거 우선도로나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실상 도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자전거 정책의 비전은 무엇이며, 그동안 자전거 도로 건설 시 주행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질문드립니다.

## 6 장애 분야 : 권리중심 해고노동자 복직과 탈시설 권리 보장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문제를 이념과 예산의 문제로 갈라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집단해고했고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권리, 시설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이념도 예산도 아닌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및 사업 복원에 관한 공약으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탈시설지원조례 복원을 포함한 삭제된 탈시설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있으십니까?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정보, 참여, 권한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탓입니다.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결정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더불어 지역계획과 예산 역시 이미 결정된 이후가 아닌 초기부터 주민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결정할수 있는 개입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권한과 재정이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재배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및 자립성, 독립성,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동 단위 생활권 의사결정 기반으로 실질화하는 전면적 조례 정비와 함께 주민의제 발굴 및 숙의,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되고 수렴된 주요 안건이 휘발되지 않고 자치구와 동 행정이 공식적으로 검토·반영 및 회신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병행해야하며 특히 주민자치 사업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사업 확대 등 예산정책도 필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후보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자치구간 연계, 의료 복지 주거 요양 등의 부문간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치구간 통합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의 균형지원과 통합정보 플랫폼의 고도화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거점형 공공 인프라 구축이 마련돼야 하며, 공공 인력만으로는 돌봄의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섹터가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민관협력 모델' 정착 및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통합돌봄 거버넌스에 주민, 돌봄노동자 등 당사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종합적 정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월경권 보장은 중요한 여성 인권과 건강권 문제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2019년 제정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조차 예산 미배정 상태로 성동구와 구로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전면 재시행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교육 월경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월경권 인식 확산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기후위기사대,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재사용 증대는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인 자원순환시설 선별원 노동자 건강과 안전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시설의 절반 이상이 민간 위탁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운영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황(각종 안전문제 발생, 열악한 근무조건)입니다. 서울시에선 현재 15개의 공공 선별시설, 9개의 민간 선별시설이 운영되고 하루 평균 처리량은 62t에 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직운영 및 노동자 직접고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보호구와 시설 안전 실태점검 강화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 절반 이상 폭염 대책으로 생수 냉장고 사업 진행하고 있으나 막대한 폐기물 발생(노원구에서만 6년간 1천만병 소비) 및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대부분 공원과 학교에 집중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경기장, 쇼핑몰 등)에는 대부분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1) 생수 냉장고 사업 중단 및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폭염 대책으로의 전환, 2) 지자체, 대규모 행사 및 공공기관 ‘생수’사용금지 및 대안적 식수제공, 3) 다중이용시설(공원, 지하철, 터미널 등) 공공음수대 의무화 제도 마련을 제안하면서, 이에 관해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당사자가 참여하는 성평등한 기후대응과 정책을 위해 후보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 정원’의 오염 문제, 졸속 개방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했고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제염 책임이라는 정치적·외교적 문제 앞에 아동의 건강권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양을 완전히 교체하거나 정화하는 대신, 오염된 흙 위에 15cm 두께의 새 흙을 덮고 잔디나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 경우 잔디가 패거나 흙이 유실될 경우 하부 오염 토양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식물 뿌리가 15cm보다 깊게 내려갈 경우, 오염 물질을 지상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 후보자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오염물질을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에 용산어린이정원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부지 내 토양 및 수질 조사,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당에서 9세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고,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서 노키즈존 관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동이 상업 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은 성수, 연남, 한남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 소재한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밀집해 있습니다.

-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내 노키즈존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을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제재 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미비하고, 신고·징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선출직 공무원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발표하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성평등이 일상인 서울을 위한 약속” 서울시 여성공약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경찰, 의료, 교육,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젠더폭력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신접수, 접근금지 요청, 임시 보호시설 연계, 긴급 심리지원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초 신고 후 72시간은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전자감독에 체계를 서울시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내 일부 구청에서 시작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친밀한관계 내 젠더폭력을 가정문화로 협소화하거나, 위기 대응을 경찰이 아닌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여성·성평등 정책은 조직, 실행체계, 재정 기반 전반에서 축소·퇴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폐지,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여성가족정책실) 또한 명칭과 기능이 축소되며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고, 정책 방향 또한 성평등 실현에서 출생·양육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양육자로서의 여성이 강조,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사회 분위기 조성, 인권 증진 및 인식 개선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을 포괄하는 정책을 담당했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해당 업무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고 '가족'에 국한된 정책 중심의 부서가 되면서,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민하는 정책보다는 결혼식 지원, 아이돌봄업무 등 기존 이성애 중심의 가족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점을 형성하는 현장 기반의 성평등 정책 실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현장 전달체계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가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더니, 지원대상에 기업이 추가되는 등 기금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원 사업의 취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복원,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시장의 한강버스, 노들섬 예술섬 개발을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환경, 안전, 경제성, 행정 절차 등에서 심각한 상황인 바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이에 대한 후보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파리시의 안 이달고 전 시장의 '보행자 중심·친환경 도시' 정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파리 플라쥬(Paris Plages, 파리 해변)'인데, 세느강의 수질을 개선해 올림픽 수영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은 정책의 신선함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로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후보님께서도 한강의 자연성회복, 한강의 시민성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수영하는 한강', '파리시 해변(70m x 20m)의 100배 모래밭 조성'을 공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강에서는 1960년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의 700배에 해당하는 모래밭이 있었고 20만명의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 모래밭의 1/100 수준이라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예산은 오세훈 시장 시절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첫째, 행안부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 사회연대경제국 신설등을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요.
- 둘째, 서울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 간 사업적 연계 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 셋째, 서울 민간의 주체들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민관 협의 구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봄, 먹거리, 주택,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3-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책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장하려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이 필요합니다.

- 후보자는 사회적금융 확대를 공약으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서면 질의서

※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들의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함.

### 녹색교통운동

GTX, 경전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시설 공급과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등에 대한 이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분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승용차 이용 분담율은 오히려 증가).

서울의 버스 운영 규모를 고려할 때 후보자님에 제안하신 버스 무상교통과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1) 예산 확보 문제 2) 민간에게 영구적 권한이 부여된 노선권 회수(폐지) 등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기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이 고려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서울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2050년 서울 전지역 내연차 운행제한 계획이 있는데 무공해차 보급 실적(특히 버스, 택시)이 미흡한 상황에서 등록금지와 운행제한에 대한 임기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연대

1. 민선 8기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들이 기관장 및 주요 보직에 임명되며, 문화행정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문화예술기관 인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견제 시스템 마련과 시민 참여 기반 문화거버넌스 구축 등 문화행정 혁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 현재 서울시 문화정책은 한강·도심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집중되면서 생활문화센터·마을예술창작소 등 지역 기반 문화정책은 축소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후보자는 시민의 생활권 기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광 수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지역문화 연계형 공정관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너머서울

1.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 노조법 2조가 입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노동자가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 서울시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서울시 설립한 지원기관 등 노동자의 '진짜사장'으로서 해당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14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또한 5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주얼리, 봉제, 제화, 인쇄 등 도심제조업 밀집지역 역시 비슷한 이유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 후보님은 해당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도심제조업 밀집지역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서울의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68.9%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의 7.7%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 후보님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서울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자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전월세 증가폭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심각해 세입자 권리 강화 중심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보님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